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민생 안정 및 농촌 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 -

2025. 1.



농림축산식품부

순서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3
1.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	3
2. 농업·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	9
3.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	13
4.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	15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	17
[붙임] 2025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	18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1 주요 정책성과

- 스마트농업 확산, K-Food⁺ 수출 확대 등 농업·농촌 혁신의 토대 마련
 - 관행농업의 대안인 스마트팜을 현장에 확산('22: 14% → '24: 16), 차세대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의 농지·산단 설치 허용 등 기반 마련
 -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* 및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성과
 - * (농식품) ('22) 88억 불 → ('24) 100(p) / (스마트팜) 드림팜 1.2억 불(사우디) 등
 -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,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제도 기반 마련
- 국민들의 먹거리 부담 완화에 총력, 민생 안정에 기여
 - '24년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전사적 대응 → 2%대로 물가 안정화
 -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성공적 안착, '24년 거래액 6,737억원 달성 → 기존 유통경로 대비 농가 수취가격 3.5% ↑, 유통비용 7.4% ↓
- 재해, 방역 등에 따른 농업 현장의 어려움 적극 해소
 - 농업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, 재해 피해 지원 대폭 확대(단가 23% 인상 등), 벼멸구 피해 최초 재해 인정 등 조치
 -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대폭 감소*
 - * '12.下~'22.上 평균 99건 → '22/'23년 75 → '23/'24년 32 → '24/'25년 23(1.13. 기준)

2 그간 정책평가

-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, 내수 부진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 애로, 농업인 소득·경영 불안정 등 민생 여건은 악화
 - 그동안 농업·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으나,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
- 낡은 규제·제도로 인해 농업 경쟁력과 농촌활력 제고에 한계
 - 특히 토지경작 중심의 농지 규제, 쌀 중심 생산구조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고도화, 외부 인력·자본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Ⅱ.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추진 여건

- 디지털·AI 등 혁신적 기술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농식품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
 -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·외식 등 새로운 산업 분야 성장
- 도시민·청년 등의 농촌 생활·창업에 대한 관심·수요가 증가하고, 반려동물·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

2 추진 방향

- ◇ 농업·농촌은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, 농업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, 농식품 수급 안정 등 **민생 안정 과제를 최우선**에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
- ◇ 동시에, **농업·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**을 위한 자원 재분배 및 투자 병행

- ①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중심으로 상반기 집중 지원
 -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농촌 생활 안정 지원 강화와 함께, 농축산물 수급 관리 및 서민 먹거리 부담 완화에 총력 경주
- ② 농업·농촌 전반의 구조 혁신 + 새로운 성장모델 마련
 - 4대 구조개혁(농지·쌀산업·경영주체·공간)으로 인력·자본 유입의 기반 마련
 -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만들어 나갈 4대 혁신 프로젝트(스마트농업, 전후방 新산업, 수출, R&D)에 1조 1천억 원 집중 투자

①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

- 농업인 소득·생활 안정
- 먹거리 안정 지원
(수급·기후위기 대응+취약계층 지원)
- 식품외식 소상공인 지원

② 농업·농촌 4대 구조개혁

- 농지제도 개편
- 쌀 산업 구조개혁
- 경영주체 혁신
- 농촌공간 재구조화

③ 농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

- 스마트농업
- 전후방 新산업
(푸드테크·그린바이오)
- 수출산업 육성 · R&D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1.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

1

농업인 소득·경영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

◇ 농업인 경영위험에 대응하여 **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소득·경영 안전망을 구축**하고, 농촌 특성을 감안한 생활 서비스 제공 확대

①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('24: 3.1조 원 → '25: 3.4)

- 직불제 시행 후 최초 기본직불 단가 인상 및 논·밭 불균형 해소
 -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% 인상('24: 100만원/ha~205 → '25: 136~215), 밭 직불단가를 논 직불의 80% 수준까지 인상
 -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농외소득 금액기준 상향 및 지급대상 농지요건 완화*
 - * (기존) 하천구역 농지, 전용 농지는 일괄 지급대상에서 제외 → (개선) 일부 지급

②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및 재해 피해 지원 대폭 확대

- 재해·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 대응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
 - '24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, '25년 신규 도입하는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 추진
 - * ('24) 고구마, 마늘, 양파 등 9개 품목 → ('25) 추가 6개(벼, 가을배추무 등) → 이후 +15개
- 재해보험은 할인·할증 제도 개선(구간 세분화 등), 신규 발생 재해* 보장 강화, 과수 4종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 개편방안 마련(1월)
 - * 병충해 보장 상품('24: 4개 상품 → '25: 6), 일조량 부족 등
 - 재해 복구단가 인상 및 지원항목 확대 등 지원제도 개선 병행 추진

③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

-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·비료 등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용 인상 최소화를 위한 업계(농협·협회 등) 협력 및 지원 확대
 - 원료 할당관세* 지속 지원과 함께 비료·사료 등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확대('24: 4,890억 원 → '25: 5,000*, 3%) 추진
 - * 할당관세 : (요소) 2% → 0, (인산이암모늄) 8 → 0 ** 비료 4천억 원, 사료 1
 - 공동구매 수입 방식 적용 품목 확대('24: 사료 → '25: +비료 등)
 - 사료는 축산농가 1조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(1.8%) 및 '25년도 만기 도래 자금(6,387억 원, 한우) 1년 상환 유예
 - 농협 자체 영농자재 지원(2조 원 규모), 비축 면세유 공급 등 추진
-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규모를 확대('24: 2,550명 → '25: 3,032)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*
 - * 계절근로자 배정: ('24) 61,248 → ('25.上) 67,438명 (6,190명↑)

④ '찾아가는 농촌 서비스'를 다양한 분야·지역으로 확산

- 농촌 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합·개편 → 단계적 확산 추진
 - (1단계)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·생필품·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농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합 지원
 - 이동형, 주문배달형, 교통서비스 연계형, 민간 참여형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,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원 채널 구축
- ① (의료) 왕진버스 대상 확대('24: 9만명 → '25: 15)
 - ② (생필품) 이동식 생필품 판매·배달(가가호호 이동장터) 확대('24: 5개 지역 → '25: 9)
 - ③ (교통) 택시,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확대('24: 690만 명 → '25: 720)
- (2단계) 교육·돌봄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활성화와 함께, 사회서비스 조직('25: 137개소)과 연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산
- '농어촌상생협력기금'(민간 조성)을 활용하여 이동형 마트,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 복지 증진 서비스 확대
 - 'ESG 실천 인정서' 수여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, 기금 용도 확대(교육·장학 중심 → 생활서비스) 등 개선방안 마련

- ◇ 농산물 생산 단계별 위험 요소를 꼼꼼히 관리하고,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재해 대응 및 비상 공급 시스템 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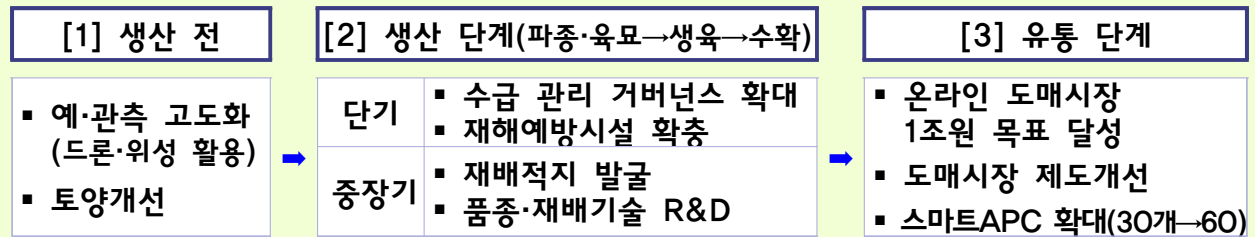
① 민·관 협업을 기반으로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고도화

-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주요 농축산물*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, 생육 단계별 위험 진단체계 마련
 - * 배추, 무, 마늘, 양파, 사과, 배, 한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
 - 주산지별 민·관 협의체 운영 확대('24: 노지채소 → '25: +과일·과채) 및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추진(강원도 여름배추, 제주 월동무 등)
 -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비묘('24: 200만주 → '25: 250), 종자, 약제 할인공급 등 지원 확대
-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 시범 판매·유통(6월) 후 별도 등급제 도입('25.下) 및 온라인 거래 확대('25 목표 2천 8백억 원)
- 품목·기후별 매뉴얼을 고도화('25.上)하고, 냉해, 폭염, 일조 부족 등 다빈도 재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*
 - * 사과·배 재해 예방시설 보급현황(% , 면적기준) : ('24) 11.8% → ('25) 15

②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한 공급 여력 확대

-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 보장
 - 배추 비축기간 연장(2개월 → 3)을 위해 CA 기술*을 도입하고, 비축기지 시설현대화(예비타당성조사 신청, 4월) 등 비축 역량 확충
 - * CA(Controlled Atmosphere) : 산소·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 억제
 - 주요 채소, 과일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('24: 25% → '25: 30, 채소)
- 해외농업개발 전략 품목*에 배추 등 채소류를 추가하고,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채소류 해외농업개발모델 구축
 - * (기존) 밀, 콩, 옥수수, 오일팜(식용유) 등 → (개선) + 배추 등 채소류 추가

◇ 기온 상승,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농업 생산·유통 등 밸류체인 관리 강화



① (생산 전) 과학적 예측을 토대로 사전 면적조정 및 물량 확보

- ☐ 실측 조사 및 항공촬영(드론)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*하고 농업 위성('25.下 발사) 활용계획 마련('25.上) 및 관측-위성센터 연계
- * (기존) 현장에 직접 나가 재배면적·재해규모 파악 → (개선) 위성정보 활용 신속 파악

② (생산)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·예방에 중점을 두고 생산체계 재편

- ☐ 배추 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('24: 2개소 → '25: 5)
- 연작 장애 개선 위한 '토양 개선프로젝트' 추진(여름배추, '25~)
- ☐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('25 신규 1천ha)하고,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(신규 3개소)
- ☐ 기후 적응형 품종(배추 '하라듀' 등) 및 재배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시험 재배를 위한 실증단지 신규 조성(6개소, 18ha)

③ (유통) 농산물 유통비용 10% 절감을 목표로 구조 개편

- ☐ '25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1조원을 목표로 계약재배 기능, 장기 예약거래 도입('25년 거래금액의 5% 목표) 등 플랫폼 고도화
- ☐ 도매법인 경쟁 촉진을 위해 성과부진 법인 지정취소 의무화('25.上, 농안법 개정), 위탁수수료를 개편('25.上, 시행규칙 개정) 등 제도개선
- ☐ 최적 생산·출하,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(APC) 확대('24: 30개소 → '25: 60) 및 산지-유통 데이터 연계 추진

- ◇ 국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**농식품 바우처, 농축산물 공급·할인 지원** 등 가용자원을 상반기 70% 이상 집중

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본격 가동

- '먹거리 안전망 패키지'를 통해 취약계층 870억원 지원(상반기 집중)
-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영양 공급이긴요한 임산부, 영유아 등 포함 가구에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 사업 전국 시행
 - * ('24) 연 최대 48만원(월 8만원×6개월) → ('25) 100(10×10) (4인 가구 기준)
 - 대학생 450만 명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(단가 2천원)하고, 성장기 취약계층 대상 우유급식 지원 확대*
 - * ('24) 우유 급식 51만 명(실제 지원 대상) → ('25) 55(지원 목표)

②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추진

- 상반기 최대 수요 시기인 설 명절에 사과·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물량 확보 등 철저히 준비
- 평시의 1.6배까지*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성수품 물량 확대
 - * 설 기간 공급량 : (배추) 4,500톤(평시比 1.9배), (사과) 30,000(8.7), (한우) 28,000톤(1.8) 등
 -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진(최대 40%)
 - * 할인지원 품목 : ('24) 25개 → ('25) 28개 (사과, 배추, 무, 소고기, 돼지고기, 밤 등)
-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공급망 확보 및 구매 지원 확대
- 원가부담 완화 위한 가공원료 할당관세 확대('24: 10개 품목 → '25: 12)
 - 환율 변동,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해 식품기업 원료 구매자금 지원 범위를 식량 이외 식품소재까지 확대('24: 밀 → '25: +유지류 등)

- ◇ 식품·외식분야 **소상공인 지원을 확대**하여 물가 상승 요인을 완화하고,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로 한식·외식 산업 세계 확산

① 외식업체 경영 부담 완화

-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(3월)하여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(9.7% → 0~2)하고 음식가격 할인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
- 외식업체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·원료매입 등 절감 지원
 - 음식점 고용허가제(E-9) 정착을 위해 요건 완화* 및 교육·홍보 추진
 - * 신청·접수 확대(4회 → 5), 신청요건(업종·업력·직무 등) 개선 추진
 - 소규모 식품·외식기업 대상 국산 농산물 원료매입 지원을 확대('24: 1,446억원 → '25: 1,634)하고, 청년 외식기업은 금리 1%p 인하*
 - * 원료매입(농업경영체 2.5% → 1.5 / 일반업체 3% → 2)

② 국제미식행사 등 계기 한식·외식 붐 확산

-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소비기반 확대
 -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*, 제조용기 검정제도 간소화, 전통주 제조원료 범위 확대** 등 주류 제조 규제 완화 추진
 - * (현행) 맥주·탁주·약주·청주·과실주 총 5종 → (개선) 브랜디·위스키 등 추가
 - ** (현행) 주원료(상위 3개 이내) 지역농산물 사용 → (개선) 일정비율 이상 사용
 - 증류식 쌀 소주 등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육성방안 마련(1분기)
-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·전통주 등 관광 연계,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K-미식벨트 확대('24: 장류 1개소 → '25: 3)
- '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'을 개최(3월)하여 해외 인플루언서(800명) 및 방한관광객 대상 한식·식문화 홍보
 - * 1천 명 이상 방문, 3백억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



2. 농업·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

1

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농지제도 틀 전환

◇ 농지가 농촌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**농지 활용도 제고, 소유·임대 규제 완화, 지자체 자율권 확대** 등 제도 합리화

* 이해관계자, 전문가, 국회 등 의견수렴 후 세부 개편방안 확정(상반기)

① 농업·농촌 여건을 반영한 농지 활용 규제 합리화

□ 농지에 복잡한 전용 절차 없이 농업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이용 범위 확대

* (현행) 경작지, 온실 등 주로 생산시설 이용 → (개선) 수직농장, 주차장·화장실 등 설치 가능

□ 농업의 범위를 유통·가공업·기자재 등 **농산업으로 확장**(’25.上, 농업 식품기본법 개정)하여 **농지 활용 다양화**

② 주말 체험 영농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규제 완화

□ 소유 자격·취득 절차 등을 **완화***하여 농지 유동성 제고

* (예시)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: 비진흥지역 → 지자체 지정 지구에 진흥지역 농지 소유 허용

□ 제한적 허용 방식의 농지 임대차*는 농업 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

* (예시) 개인은 임대 조건 완화(현행: 8년 자경 후 임대 가능 원칙) / 법인이 단독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도 농지 위탁·임대 허용 등

③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농지 관리체계 개편

□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**관리권한을 확대**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

□ 농업진흥지역의 안정적 유지·관리를 위한 **지원방안***을 마련하고, 논 편중(89%) 개선을 위해 **지정기준 다변화** 추진

* (예) 논 중심의 지정 기준(평야 10ha 이상)을 시설원예 등 다양한 농업형태별 설정

- ◇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·소비체계로 근본적 구조를 전환하고,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안보 기반 마련

①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소비·공급체계 전환

- 8만ha 감축을 목표로 ‘벼 재배면적 조정제’ 시행
 - 지자체 협력하에 지역별 감축계획 수립(1월), 용자 등 인센티브 부여, 실적관리·점검(위성 연계)을 통해 감축 목표 철저히 이행
-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쌀 소비·공급체계 전환
 - 고품질 전문생산단지(50~100ha)를 시·도별 1개씩 시범 운영하고, 품종별 특성(맛, 향 등)을 부각한 단일품종·인증쌀 마케팅 추진
 - 고품질 쌀 생산 확산을 위해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,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 양곡표시제 개편(양곡법 시행규칙 등 개정)
-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및 식량원조 물량 확대(‘24: 11만톤 → ‘25: 16)

② 밀·콩 등 전략작물 자급기반 확충

-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·콩 등 전략작물 육성 강화
 -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(개)을 추가하고, 지급면적·단가 인상*
 - * (밀) 50만원/ha → 100, (하계조사료) 430만원/ha → 500, (깨) 100만원/ha(신규)
 - 밀·콩 전문생산단지 및 비축 확대, 제품 개발 등 소비 기반 확대(연중)
-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안보 품목*을 중점 점검하고, 비축·대체 수입선 확보 등 대응체계 확립
 - * 농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입 원료

◇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
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,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

* 청년농 목표(누계) : ('23) 12.6천명 → ('24) 17.6 → ('25p) 22.6

① 농업법인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체 혁신

- 규모화·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 모델을 4가지로
유형화*하고, 가이드라인 마련(4월) 및 세제** 등 제약요인 해소

* ①농작업 위탁형(일반적 형태), ②위탁+임대 혼합형, ③임대형, ④주주형(고도화 단계)

** 농업법인 대규모 출자를 위해 출자 시 양도소득세 100% 감면제도를 이월과세로 전환 검토

-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

- 교육·컨설팅, 농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R&D, 직접 생산한 태양광
잉여전력 거래 등을 허용('25.下,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)

② 청년들이 농업·농촌에 정착·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

- 진입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청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*

* 청년 성장단계별 정보 제공, 컨설팅, 지원사업 및 투자·펀드 연계

진입	성장	창업
- 현장실습 경험 제공 - 정착자금+농지 지원	⇒ - 맞춤형 창업 컨설팅+교육 - 스마트팜 장기 임대	⇒ - 전용펀드(470억원) 연계 지원 - 농촌자원 활용 창업 지원

- 안정적 영농 진입을 위한 정착자금, 맞춤형 농지('24: 3,105ha →
'25: 3,420) 등 지원과 함께 현장실습 정착 프로그램* 신규 도입(4월)

* 240명을 선발하여 6개월 영농 실습 교육과정 운영 + 정착자금(110만원 x 6개월) 지원

-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은 10년 장기(현행 3년) 임대형을 신규
지원(4개소)하고, 스마트팜 전문교육기관 확대('24: 2개소 → '25: 4)

- 농촌자원을 활용한 Agri-biz+ 청년 창업 콘테스트(5월), 창업자 간
네트워킹, 교육+컨설팅+사업화 자금 등 연계 지원 신규 추진

- 청년들이 원하는 농촌보금자리('24: 17개소 → '25: 27) 등 생활밀착형
지원을 확대하고, 정책 참여 채널 마련 등 추진

- ◇ 농촌공간계획,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제도적 기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'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' 추진

① 농촌을 산업·주거·사회서비스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

- 지자체(139개 시군) 스스로 여건에 맞게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공간계획 수립
 -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·산지 등 입지규제 완화* 및 재정·펀드** 투자를 지원하고, 5개 선도지구 지정 및 중점 육성
 - * 농지 전용 패스트트랙 적용(지구별 적합 시설의 농지 전용), 지자체 전용권한 확대 등
 - ** 농촌협약(농식품부), 지방소멸대응기금(행안부), 지역활성화 펀드(기재부) 연계 등
-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'자율규제혁신지구'의 입지규제 특례 범위 설정 등 세부 도입방안(2월) 및 근거법률(4분기) 마련

※ 사례) 고창 상하농원: 낙농을 테마로 축사·체험 공방·숙박시설 복합 조성(민·관 공동 투자)
곡성 러스틱타운: 한옥 등 유희시설을 위케이션 공간으로 전환(지방소멸기금 투입)

②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'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' 추진

-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별 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편('25.上)하고 특화산업에 집중 투자
- 새로 재편된 농촌 공간에 테마·치유관광, 위케이션 등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'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' 추진(270억원)
 -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농촌 융복합, 전후방산업 분야 공동창업·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·자금 등 신규 지원(1개소)
 - 농촌에 장기체류하면서 여가·관광을 즐길 수 있는 지자체 주도형 '농촌체류형 복합단지' 3개소 시범 조성('25.下)
 - '빈집은행 플랫폼' 구축('25.下), 창업공간 등 조성을 위한 빈집 재생 확산('24: 2개지역 → '25: 5) 및 「농촌빈집정비특별법」 제정 추진

3.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

◇ **대규모 육성 지구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하고, 농업용 AI·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**를 통한 외연 확대

* 스마트 온실 : ('24) 16% → ('25p) 20

◇ **新산업 분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단위 방식** 지원 추진

① 지구 단위 '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' 추진 (세부방안 1월 발표)

□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(가공 등)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「스마트농업 육성지구」 지정('25년 4개소 신규)

○ 지자체가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한 전후방 산업 연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농업법인·기업 등 협력 투자 방식의 모델 마련

○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경감 등 특례 및 정책자금 연계* 지원

* 스마트농업 전용 펀드(총 960억원, '25년 +200억원), 스마트팜 종합자금(1,000억원) 등

□ 스마트농업 성장과 외연 확장을 위해 R&D·표준화 등 지원 확대

○ 건물형 수직농장,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입지규제(농지·산단·개발제한구역 등) 완화

○ 호환성을 위해 스마트팜 국가표준 적용 기업('24: 291개社 → '25: 340) 및 데이터 솔루션 보급('24: 온실·노지 30백 농가 → '25: 39) 확대

○ 농업용 드론·로봇·자율주행 농기계 등 R&D·실증 추진

②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'전후방 新산업 프로젝트' 추진

□ R&D·생산거점 확대 등 新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1,212억 원 투자

① 급속히 성장하는 푸드테크 시장이 로봇·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·생산거점 및 상용화 기반 확대

- R&D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지원센터 확충('24: 3개소* → '25: 5)

* '24년 3개 센터(식물기반식품, 푸드로봇, 푸드업사이클링)

- 민·관 협업(중기부·삼성 등)을 기반으로 식품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패키지 확대('24: 30개社 → '25: 70) 등 생산기반 전환

② 그린바이오산업 집적화를 위해 육성지구 선정(10월), 연구·생산 거점 확대('24: 11개소 → '25: 12) 등 인프라 지속 확충

- 미래혁신성장펀드('25: 400억 원)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 활성화

③ 新산업 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R&D 프로젝트 지원

□ 스마트농업·그린바이오·푸드테크 등 미래산업에 1,088억 원 R&D 투자

- 현장 수요가 많은 기술, 중장기 현안* 중심 투자 병행

* 축산 환경 개선, 농업 기계(현장 수요), 기후변화, 농촌소멸(현안)에 920억 원 투자

□ 투자 효율화, 융복합 협력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('25~'29) 농식품 R&D 투자 로드맵 마련(3월)

□ '민간제안펀드' 신규 조성(100억 원), 민간이 제안한 新산업에 투자

④ K-Food⁺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추진 (세부방안 2월 발표)

□ 중동·남아공 등 新시장 및 美·中·日 2선 시장(중소도시) 중심으로 마케팅·물류 등 자원 집중으로 수출 영토 확장(新시장 비중 6% → 10)

-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, 해외 바이어 협의체 확대('24: 9개 권역 → '25: 18) 등을 통해 新시장 현지 정보 파악 및 시장 개척

- 환율·물류 등 변동성 심화에 대비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데스크 운영을 확대('24: 12개 → '25: 18)하여 기업 애로 해소

□ 10대 전략 품목*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(포도·딸기), 제품개발(쌀가공 식품), K-Food 수출박람회 개최 등 대규모 마케팅(라면) 추진

* 파프리카, 포도, 딸기, 배, 인삼, 김치, 라면, 쌀가공식품, 과자, 음료

□ 중동·북미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('24: 4개 → '25: 6)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신규 지원(6개社)

4.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

1 동물복지 인프라 확대 및 연관산업 육성

◇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·현장 관리에 집중하고, 동물의료·펫푸드 등 연관산업 육성

* 제3차('25~'29) 동물복지 종합계획 마련(2월) /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 마련(6월)

①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안착

- 동물등록제 확대 및 보호시설, 인력 등 반려동물 보호 역량 강화
 - 동물 유기·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단계적 확대*
 - * (현행) 반려견 → ('25) 특수목적견, 동물생산업장 부모견 등 → ('26) 구조·보호견
 - 주민편의시설과 연계한 지자체 보호센터 확대('24: 87개 → '25: 102)
 - 명예동물보호관 등 민·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보호 인력 확충
-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을 위해 기질평가장, 훈련소 등 인프라를 구축(2개소), 표준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(3월) 등 추진
-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업계의 조기 전·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·단속을 병행하고,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(3월) 운영

② 반려동물 연관산업 체계적 육성

- 시장 규모가 큰 동물의료·펫푸드 육성 및 연관산업 다양화
 -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,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 동물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'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' 마련(6월)
 -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·표시·영양 등에 대한 별도 기준 도입(6월)
 - 해외연구·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동식 장묘업 제도화를 추진하고, 변화하는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충방안 검토
- 「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*」 제정 추진(11월)
 - *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, 벤처 양성, 투자 지원, 특구 지정, 우수 제품 지정 등

- ◇ **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성을** 높이기 위해 **환경·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** 하고, **선제적 가축 방역시스템 고도화**를 통해 전염병 발생 최소화

* 중장기('25~'29) 가축방역 발전 대책 마련(2월)

① 친환경 농업 공급·수요기반 확대

-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* 및 지급상한 확대('24: 5ha/호 → '25: 30)
 - * '25년 단가(논): (유기) 70만원/ha → 95, (무농약) 50 → 75 (유기지속) 35 → 57 등
- 공급·소비 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목표, 인증방식 등 재점검을 거쳐 친환경 농업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(1월)

②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기반 확대

-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농업의 환경 부담 최소화
 -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*와 함께, 법적 근거 마련 추진
 - * 가을갈이, 가축분뇨처리 등 활동 추가 / 산란계 등 품목 추가(질소저감사료)
 - 농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에서 민간이 거래 할 수 있는 '탄소 크레딧' 거래체제로 단계적 전환 추진
 - 지역 단위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* 마련 신규 지원(시·군 2개소)
 - * 지역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, 에너지원 파악, 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등
- 발전소 연료로 축산 고체연료 활용*(남부발전) 추진
 - *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 R&D 기획 추진(산업부·환경부 협력)

③ 민·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

-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등급제(시설·관리수준 평가) 시범 도입(산란계), 위험도 평가 확대(기존 AI → AI·ASF) 추진
- AI 팬데믹 대비 포유류 등 예찰 강화, 신규 유입 우려 전염병(가성우역, 아프리카마역) 백신 비축 등 사전 대비 철저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

1 민생 분야 5대 패키지



1 농업인 소득·경영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

면적직불단가

100 ~ 205만원/ha → 136 ~ 215만원/ha

수입안정보험

시범운영 (9개 품목) → 전국도입 9개 품목
시범운영 6개 품목

재해보험

· 할인·할증 제도 개선
· 신규 발생재해 보장 강화
* 병충해보상상품('24. 4개 → '25. 6개)
· 과수 4종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



농업경영비 부담 완화

비료·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확대
4,890억 원 → 5,000억원(3%)
외국인 계절근로 규모 확대
61,248명 → 67,438명



찾아가는 농촌서비스 확산

농촌 왕진버스: 9만명 → 15만명
가가호호 이동장터: 5개소 → 9개소
농촌형 교통모델: 690만명 → 720만명



2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고도화

10대 농축산물
수급 관리
거버넌스 강화

사과·배 재해 예방시설 11.8% → 15%
채소 계약재배 물량 25% → 30%
배추 비축기간 연장 2개월 → 3개월



3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·유통체계 개편

1 생산 전

· 예·관측 고도화 (드론·위성 활용)
· 토양개선프로젝트 (여름배추 주산지)

2 생산 단계

단기 · 수급 관리 거버넌스 확대
· 재해예방시설 확충
중장기 · 재배적지 발굴
· 품종·재배기술 R&D

3 유통 단계

· 온라인 도매시장 1조원 목표 달성
· 스마트APC 확대(30개 → 60)



4 취약계층 및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

농식품 바우처 분 사업 추진
연 최대 48만원 → 100만원 / 4인 가구
월 10만원 x 10월



역대 최대 규모 지원
설 할인지원 품목 25개 → 28개
* 성수품 물량 확대 (평시의 1.6배)



5 식품·외식분야 소상공인 지원 확대

식품·외식기업 국산농산물
원료매입 지원(금리 2.5~3%) → 1.5~2%
청년기업



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→ 0~2%
(수수료 9.7%)

2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



1 농지제도 개편

농지 활용도 제고
소유·임대 규제 완화
지자체 자율권 확대



2 쌀산업 구조개혁

벼 재배면적 조정 · 고품질 쌀 생산 · 소비 촉진
전략작물 육성 강화
* (밀) 50만원/ha → 100만원/ha
* (하계조식료) 430만원/ha → 500만원/ha
* (개) 100만원/ha(신규)



3 경영체 혁신

공동영농 모델 4가지 유형화
* ①농작업 위탁형 ②위탁+임대형 ③임대형 ④주주형
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(농업 → 농산업)



4 농촌공간 재구조화

농촌활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
*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
* 민집재생 확산(2개 지역 → 5개 지역)
* 민집은행 플랫폼 구축

3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4대 프로젝트



1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

*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, 건물형 수직농장,
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차세대 모델 확산



2 전후방 신산업 프로젝트

*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확대(3개소 → 5개소)
* 그린바이오 연구·생산거점 확대(11개소 → 12개소)



3 新산업 대규모 R&D 프로젝트

* 미래 기술에 1,088억원 투자
* 농식품 R&D 투자 로드맵 마련



4 K-Food+ 수출 140억불 추진

* 신시장 비동 확대(6% → 10%)
* 스마트팜 컨소시엄 확대(4개 → 6개)

4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



수의전문의, 상급병원 도입 등
동물의료체계 정비
펫푸드 기준 마련, 다양한 서비스업 제도화



친환경 직불단가(는) :

유기 70만원 → 95만원/ha
무농약 50만원 → 75만원/ha
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
산탄계 농장 방역등급제 시범 도입

발표시기	중요 대책(안)	소관
1월	○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	○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	농식품혁신정책관
	○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 종합계획	국제협력관
	○ 친환경농업 확대 대책	농식품혁신정책관
	○ 럽피스킨 중장기 방역대책	방역정책국
2월	○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('25~'29)	동물복지환경정책관
	○ K-Food+ 수출 대책	식품산업정책관
	○ 25년 식량원조 추진계획	국제협력관
	○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	농촌정책국
	○ ^(가칭)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	농촌정책국
	○ 농업용 드론산업 발전 방안 마련	농식품혁신정책관
	○ 중장기('25~'29) 가축방역 발전 대책	방역정책국
	○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('25~'29)	유통소비정책관
3월	○ '25년 밀 산업육성 시행계획	식량정책관
	○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('25~'29)	농식품혁신정책관
	○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	방역정책국
	○ 25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	농업정책관
4월	○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'25년 시행계획	농업정책관
5월	○ 여름철 농업재해대책	농업정책관
	○ 고랭지배추 수급안정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	○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6월	○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	축산정책관
	○ 제1차 동물의료 육성·발전 종합계획('25~'29)	동물복지환경정책관
8월	○ 농촌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	농촌정책국
9월	○ '2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	식량정책관
	○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	○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특별방역대책	방역정책국
11월	○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	○ 겨울철 농업재해대책	농업정책관
	○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('26~'30)	농촌정책국
12월	○ 제6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('26~'30)	농촌정책국
	○ 축산물 등급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	축산정책관
	○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방안	동물복지환경정책관